

도, 국정과제 반영·내년 국비 확보 총력

김관영 도지사, 지난주 김민석 총리에 현안 직접 건의 새만금·안티드론·공공기관 이전 등 정부 협조 요청

전북특별자치도가 국정과제 반영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직접 정부 주요 인사를 만나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으며, 도청은 이를 신속하게 도민들에게 알리며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천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11일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북의 핵심 아젠다가 국정과제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정기획위원회, 정부 부처를 김관영 도지사, 김중훈 경제부지사·노홍석 행정부지사가 방문해서 전북 현안에 대한 국정제 반영할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오는 13일 국정과제 반영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당일이나 다음 날 추가 브리핑도 검토 중이다.

또한 18일에는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 점검회의를 열어 도 내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25일 주간에는 전북연구원과 함께 '미래 성장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초청돼 추진하고 있다.

천 실장은 특히 지난 4일 김관영 도지사가 김민석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 전북 현안을 직접 건의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완주 전주 통합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인센티브 대폭 확대 △새만금 주요 현안 해결 △새만금 안티드론 관련 새만금 MP 변경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에 총리는 "전북 입장을 직접 들었다"며 8월 말~9월 초로 예정된 김의겸 새만금청장 보고서 김 지사의 동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연말로 예정됐던 새만금 위원회 개최 전, 별도 보고 기회를 마련해 전북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또한 김 지사는 새만금을 국가 첨단 전략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기 위한 대폭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베가 샌드박스'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개편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때 새만금 개발에 필요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티드론 사업의 경우 새만금청 내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총리는 "충분한 실무협의를 거쳐 찬성·반대 의견을 조율하라"며 총리실에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면 "논의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예산 확보와 관련해 천 실장은 "기획재정부 3차 심의가 진행 중"이라며 "20대 중점사업을 선정해 지역



천영평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이 11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북자치도가 국정과제 반영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권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14일 김 지사가 유은철 기재부장관과 면담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번 정부 들어 "전북자치도의 발전계획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도는 정부의 '5극 3축' 구상에 맞춰 전북특별법 상 세계 감면, 국가보조금 차등 지원, 중앙부처 권한 이양 등 자

치권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재정 기여도가 높은 55개 기관을 전북에 유치해 지방재정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략적 예타 면제 추진도 병행하고 있다.

2025년 글로벌대학 본 지점과 관련해선 "2023~24년 선정 지역을 감안하면 전북이 유리하지 않지만, 정치권·

시군·대학과 연대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탄우홀 미팅 개최 여부에 대해 천 실장은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조율 중이다. 도에서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는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권한이 대통령실에 있어 관여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민주 이원택 의원 "국민 안전 육해상 가릴 것 없이 지켜져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기사를 상대로 폭행하거나 협박해 운전기사를 승객,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운송수단이라는 점에서 자동차와 유사한 선박의 경우에는 항해 중인 운항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해상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기사를뿐만 아니라 승선원의 위태로 공공의 안전과 해양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 이원택 의원은 항해 중인 선박 운항자를 폭행·협박한 사람을 가중처벌함으로써 해상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다른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항해 중인 선박 운항자를 폭행·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둘째, 항해 중인 선박 운항자를 폭행·협박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 "현재 자동차 운전자 보호처럼, 항해 중 선박 운항자를 폭행·협박하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해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운항자와 승객의 안전을 지키고 공공의 해상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로써 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운 바다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역설했다. /이만호 기자



더민주전북혁신회의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에서 혁신공동회를 연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관사 태극기'로 독립정신 계승 결의

더민주전북혁신회의, 광복 80주년 맞아...첼린지 전개 혁신공동회 열고 향후 1년간의 활동방향·사업계획 논의

더민주전북혁신회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에서 혁신공동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시대에 걸맞는 비전을 전북을 중심으로 실현하며 당원 중심 정당을 구현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북 혁신회의대표단과 상임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더민주전북혁신회의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해 '진관사 태극기' 달기 운동을 결의했다. 진관사 태극기는 2009년 서울 진관사 철성각 해체 과정에서 독립운동 관련 신문과 함께 발견된 유물로, 일제강점기 당시 일장기 위에 태극과 사괘를 먹으로 덧칠해 강

렬한 항일정신과 독립의지를 드러낸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2021년 10월 25일에는 보물로 지정되며 그 역사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더민주전북혁신회의는 오는 8월 15일 광복절까지 '진관사 태극기'를 전개한다. 특히 태극기 매일 달기 운동, 휴대폰 배경화면 지정, SNS 프로필 바꾸기 등을 통해 당시의 독립정신과 나라사랑의 마음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며 확산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날 혁신공동회에서는 지도부 비전 제시와 함께 더민주전북혁신회의 향후 1년 간의 활동방향과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이만호 기자

"조국 사면, 이 대통령 결정에 감사"

조국혁신당 "국민 덕에 치유의 공기 호흡 국민주권정부 뒷받침할 개혁 동력 생겨"

조국혁신당이 11일 조국 전 대표 사면·복권에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의 지방선거 출마 여부 등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 "앞서 시간 이야기"라면서도 당의 재건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긴급 기자회견에서 "내란 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에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가 치유의 공기를 호흡한 건 국민 덕"이라며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전 회복과 국민주권정부를 뒷받침할 개혁의 강력한 동력이 생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진영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조국혁신당이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 출사 후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조 전 대표 사면 복

권으로 인해 강력한 개혁 동력이 생긴 것"이라며 "오늘을 계기로 조국혁신당은 다시 한번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 검찰개혁 등 개혁 과제를 완수하는 데 더더욱 힘을 모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면·복권으로 인해 중앙정치에 복귀할 수 있는 조 전 대표가 내년 서울시장 선거 등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김 권한대행은 "지금 중요한 건 내년 선거보다는 내란 청산과 개혁 과제를 향해 어떤 일을 해 나가느냐, 그 중심에서 저희 당과 조국 전 대표가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후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대회 일정에 대해서는 "당원들과 국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정치권에서 응답을 할 의무가 있다"며 "그것 역시 천천히 시간을 갖고 저희 당 내부에서 논의해가도록 하겠다"고 답

했다. 황현선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조국혁신당 2기가 시작돼야 한다"며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당의 재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사무총장은 "사회권 선진국이거나 한국 사회 정치 개혁, 미래 비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시기가 돌아온 것"이라며 "공백이 있던 부분에 있어 조 전 대표가 돌아오면 비전 등을 리빌딩을 해야한다는 공감대는 광범위하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컨셉은 회복과 연결 등을 생각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단절은, 조국 전 대표가 사회에서 격리된 것도 있었고 대선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연결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 권한대행, 황 사무총장을 비롯해 이해민, 차규근, 황은하, 강경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전 전원 허리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조 전 대표가 구치소에서 출소하는 날 함께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뉴스1

전주시민 1명, 윤석열 수사 촉구 1인 시위 나서

"사형 판결 때까지 계속하겠다" 강한 의지 표명

전주에서 한 시민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미흡하다며 1인 시위를 벌여 주목을 받고 있다.

11일 오전 8시 10분경 전주시 KT남전주전화국 앞 사거리에서 시민 채모(57)씨가 피켓을 들고 홀로 시위를 진행했다.

출근길 시민들이 바쁘게 오가는 가운데 벌어진 이번 시위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관련 수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파악된다.

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도 받았던 수사를 받지 않고 있어 울분을 참을 수 없다"고 시위 이유를 밝혔다. 그는 "그간 시위를 쉬고 있었는데 상황이 답답해 다시 나오게 됐다"고 덧붙였다. 시위 기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11일 전주시 KT남전주전화국 앞 사거리에서 시민 채모씨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이 무고한 시민과 정치인을 위협에 빠뜨리려 했던 사실을 잊고, 정당한 재판에도 불응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사형 판결을 받을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팀에 의해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다. 또한 김건희 특검의 소환과 체포 영장 집행에도 불응한 상태다.

채씨는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다시 거리에 나왔다"며 "국민들을 위협에 빠뜨리려 했던 일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후 7월 다시 구속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내란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김건희 특검팀도 별도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AI로 그리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새만금개발공사, 이미지 공모전 31일까지 진행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이하 공사)는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미래를 시각화하는 'AI로 그리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이미지 공모전을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 새만금의 미래도시를 상상하고 표현해 보는 방식으로, 스마트 수변도시의 공간과 생활상을 국민의 시선과 감성으로 풀어내는 참여형 창작 공모전이다.

공모 대상은 AI 및 스마트 수변도시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는 수변도시 조성 방향과 부합하는 이미지를 생성형 AI 도구(Chat GPT 등)를 자유롭게 활용해 제작한 뒤, 작품 설명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총 16점의 수상작이 선정되며, 이 중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에는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상과 함께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향후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비전을 알리는 SNS 콘텐츠 및 영상 등 디지털 홍보자료로 재가공되어 국민과의 소통에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민주 이성운 의원 "올해 안에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통과"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전주시)은 최근 전주가정법원설치특별위원회 김철호 위원장, 이덕춘 간사, 전북 지방변호사회 이삼일 부회장을 만나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뜻을 같이 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성운 의원은 "전주지법 관할 인구와 가사사건 수가 이미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보다 많음에도, 전북은 여전히 가정법원이 없는 4곳 중 하나"라며 "사법 접근권 회복과 지방 소의 해소, 사법 복지 확대를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운 의원은 2024년 6월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설치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한 이후 법원 행정처와 실무협의를 이어왔다. 이어 "2025년 안에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헌법회복·전북회복의 길에 전북·전주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뛰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호 위원장, 이덕춘 간사, 이삼일 부회장은 "전북은 가사·소년사건이 많은데도 가정법원이 없어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